



☞ 정책동향 ☜



〈하반기 경제운영계획〉-벤처 M&A펀드 1천억 조성을 통한 활성화

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서 “벤처기업간 M&A활성화를 통해 기술통합 및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M&A시 피합병 법인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월결산금 승계를 위한 피합병 법인 요건 가운데 ‘1년 이상 사업영위’의 조건을 ‘수익발생 시점’에서 ‘비용지출 시점’으로 바꿔 자금난으로 결손금이 많아진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세 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 인수 분량을 현행 10%에서 3~5%로 낮춰 대기업이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의 인수를 용이하게 했다. 이와함께 M&A시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주식교환시점에서 하지 않고 나중에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처음 취득 주식이

액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기업은 자체적인 연구 개발도 중요하지만 1개 기업이 독자적으로 여러 분야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어려워 부족한 분야의 기술은 M&A를 통해 상호 보완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부, 2007년까지 지방대 10곳 연구중심대 육성

과학기술부(장관 박호근)는 2007년까지 10개 지방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되는 지방대는 각각 연간 100억원씩 10년 동안 모두 1000억원을 지원받게 돼 총 1조원이 10년 동안 투자된다.

이올러 지역별 공동연구시설 등 연구시설 설립과 핵심 연구 인력도 지원받는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방화 시대에 맞춰 지방대를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로 연구중심대학을 선정,육성하기로

중기청, 보스턴 벤처공동물류센터 개소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지난 14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미국 보스턴에서 유창무 중기청장, 장홍순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 공동물류 및 AS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보스턴 벤처단지 300평 규모로 들어선 이 센터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연구개발(R&D), 시장개척, 수출품 보관, 애프터 서비스 등 수출시장 개척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중기청은 “벤처 수출 제품은 주로 국방물자, 대기업 중간재, 대규모 플랜트 설비 등으로 현지에서 직접 틈새시장을 공략할 필요성이 커 벤처기업 수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센터를 수출지역에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번 보스턴 센터의 성과에 따라 하반기에 미국 서부지역에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했다. 우선 내년에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2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어 2007년까지 한 해에 2~3곳씩 선정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연구실적 연구기반 등을 평가,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하되 지역별로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또 지방대의 연구중심 축인 부설 연구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지방대 부설연구소 710개 가운데 약 5%(4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대가 지역산업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출연연구소와 지방대학간 인력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이미 원자력 관련 싸이클로트론 연구소를 조선대와 경북대에 설치토록 했으며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소 분소 5곳 중 2곳을 올해 안에 광주과학기술원과 제주대에 설치할 방침이다.

☞ 산업동향 ☜



벤처캐피털 유동성위기 일단 모면, 기술신보, CLO 상환만기 1년연장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던 벤처캐피털업계의 대출채권유동화증권(CLO) 문제가 지급보증조건 수정을 전제로 만기를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임시 봉합 처리됐다. 이 신종증권 발행으로 벤처캐피털회사들은 모두 765억원의 벤처투자 자금을 확보했으나 불경기 속에서 금년 6월부터 상환 만기에 직면했다.

벤처캐피털업계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CLO로 인해 벤처캐피털회사들이 금년 6월에 갚아야 될 금액은 310억원이다. 이중 지난 달 말 만기에 상환된 금액은 76억원에 불과했다.

벤처캐피털업계 관계자는 “나머지 창투사들은 전액 만기 연장을 요청했거나 일부 상환에만 응했다”고 전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금년 6월 만기분인 310억원 중 214억원에 대한 상환만기를 1년 연장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기 연장 전제조건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범위를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벤처캐피털업계에서는 상환 만기 1년 연장을 임시 봉합 조치로 풀이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벤처캐피털협회 관계자는 “벤처캐피털회사들이 벤처 기업 상장으로 투자액을 대거 회수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이 강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CLO로 인한 유동성 우려는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업계동향 ☜



〈IT〉 KOTRA, IT수출 거점 만든다

KOTRA(대표 오영교)가 북미·중국 등 주력시장에 30대 IT 수출거점 무역관을 지정, 전사차원의 IT수출 전담체제를 구축한다. 30개 거

점은 전체 99개 해외무역관 가운데 핵심지역만을 고른 것이다. KOTRA는 앞으로 이곳에 IT에 특화된 품목별 해외시장조사·바이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0개 IT수출 거점사업은 지난 5월 발족된 ‘IT·지식서비스수출지원센터’의 첫 인프라 구축작업이기도 하다.

KOTRA는 IT 및 첨단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국·중국 등 거대시장과 베트남·중동·중남미 등 신흥 성장시장 중심으로 21개국 30개 무역관을 IT·지식서비스 수출거점무역관으로 선정,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30개 거점은 유럽 8개지(프랑크푸르트·뮌헨·파리·런던·암스테르담·코펜하겐·부다페스트·취리히), 북미 6개지(뉴욕·워싱턴·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애틀랜타·토론토), 중국 5개지(베이징·상하이·홍콩·광저우·타이베이), 아시아대양주 5개지(시드니·퀼라룸푸르·하노이·첸나이·마닐라) 등이다. 또 일본 2개지(도쿄·후쿠오카)와 중남미 2개지(멕시코시티·상파울로)를 비롯, 중동(두바이)과 러시아(모스크바) 등도 각 1개지씩 포함됐다.

☞ 기술동향 ☜



디지털가전분야 기술 1~2년내 중국이 추월

한국산업기술재단(이사장 이기준)은 ‘디지털가전 한중(韓中) 기술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술력이 중국에 3~7년 앞서 있으나 1~2년 내에 비슷하거나 일부 품목에서 역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가전은 한국의 수출 주력 분야로 한 해 세계시장 규모가 100조원에 이른다.

중국의 약진 요인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일본으로부터 고품질 생산장비 구입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 등이 꼽혔다.

산업기술재단은 디지털가전의 핵심부품인 광(光)픽업, 디지털TV 튜너, MPEG-2 디코더칩 등 3가지 분야에서 두 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비교했다.

빛을 이용해 정보를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광픽업 기술은 한국이 중국에 3~4년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경 광픽업 생산기술은 한국과 중국이 대등해지고, 설계 및 신제품 개발기술은 1년 이내로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주파수 선택기능을 가진 디지털TV 튜너 생산기술은 2003년 한국과 중국이 비슷하거나 중국이 6개월 정도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MPEG-2 디코더칩은 한국이 6~7년 중국에 앞선 절대우위 분야로 꼽혔다. 다만 2003년에는 2~4년, 2010년에는 1~3년으로 기술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기술재단은 중국 기술의 급성장에 대비해 ▲정부 주도로 한국 기업의 공동대응 ▲한·중 기업간 협력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기술표준 적용 ▲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